

# 치산은 국가 백년대계의 기본

- 산림에 대한 인식부족 아쉬워 -

김 사 일 / 임업연구원 과장

나는 얼마전에 서독에 관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그 내용의 일단을 소개하면 혼기에 달한 처녀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결혼 상대로 배우자를 고른다면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을 택하겠느냐 하는 설문조사에서 임업공무원을 택하겠다는 처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의사, 다음이 대학교수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그것은 혼기를 앞둔 처녀들만의 생각만은 아니고 임업인들의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단적인 예이기도 하다.

이와같이 서독의 임업인이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의 산림에 대한 인식이 대단하고 그에따라 서독의 산림을 세계정상 수준으로 올려놓았다. 이것은 임업인만에 의하여 이룩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과감한 투자와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임업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준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농어민 후계자인 젊은이들이 결혼적령기가 되어도 시집을 오겠다는 처녀가 없어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고 때로는 세상을 비판한 나머지 자살을 한 젊은이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니 임업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임업을 전공하고서도 대부분 비임업분야로 진

출하고 있는 현상은 임업계에는 진출할 수 용능력이 없는데도 이유가 있겠지만 임업이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지못하는데에 크게 연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러한 것들은 산림의 자원화가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된다는데 대한 인식부족과 임업특질인 투자효과의 장기성때문에 국민이나 위정자가 임업을 이해하려고 들지 않고 임업을 외면하는데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회환경은 임업을 빛을 잃게 하였고 임업은 사양산업으로 취급되어 정부기구축소의 말만 나오면 임업관련 기관이 항상 먼저 거론되어 왔고 또 축소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각 도 산림국, 지방관리소, 도유림사업소, 산림자원조사연구소 등등) 설상가상으로 임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의 빈번한 이동은 임업발전의 저해요인이 되었고 임업공무원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린 것도 사실이다. 임업공무원으로 투신한지 30년이 넘었지만 임업공무원이란 자부심보다 기구축소의 이야기가 있을때마다 임업공무원이 된 것이 후회스럽고 창피하게 생각한 것이 솔직한 나의 고백이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 임업역사는 일본 치하의 산림수탈시대와 해방이후의 혼란기를 겪어오면서 그래도 임업정책다운 정책을 수행하였고다 생각되는 기간은 산림청 발족이후인 불과 20여년밖에 되지않은 짧은



기간에 세계임업사에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산림녹화의 위업을 달성하였다.

이제 우리의 임업도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된 이때 산림청 기구 축소문제가 대두되다니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다. 과거 20여년전에는 산림정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부 내국인 산림국을 산림청으로 독립 승격시켰는데 산림정책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림청을 농림수산부 내국으로 다시 환원시켜야 한다는 논리는 역사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시대착오적인 논라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임업발전의 후퇴를 자초하는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임업을 하는 사람은 곰과 같이 미련하고 고집불통이며 보수적이란 말을 많이 듣는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임업은 10~20년에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100~200년을 내다보고 하는 장기 사업이기 때문에 곰과 같이 끈기있는 사람이 아니면 견디어내기 어렵고 또 임업의 특질상 그때 그때 변화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기가 어렵기때문에 고집불통이고 보수적이란 말을 듣는 것도 당연하다. 그때 그때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임업정책을 임기응변식으로 수행한다면 결국 시작은 있는데 결과가 없는 정책이 되어 앞으로 한치도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 녹화가 산림사업의 궁극적 목표가 아니다

우리나라 산림은 이제 녹화단계에서 자원화 단계의 전환기에 들어섰으며 앞으로 목재수출국의 수출규제 강화에 대처하고 국민여망에 부응하는 산지자원화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산림경영의 기반구축, 소득원 확

보를 위한 다목적 산림경영기술의 체계화, 안정된 산업용재 수급을위한 용재림 경영기술의 개선, 산업용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유통구조의 개선, 국토보존을 위한 각종 재해방제림조성, 공해방지를 위한 환경림조성, 산업용수 확보를 위한 수원함양림조성, 국민보건을 위한 휴양림조성 등 추진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 이 때 산림녹화가 다 되었는데 산림청을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 마치 산림녹화가 임업의 전체인양 잘못된 사고에서 산림청을 없애야겠다고 만에 한번이라도 생각하였다면 차체에 불식되었으면 한다.

우리나라는 산림면적이 전국토의 66%를 차지하고 있지만 목재의 자급율은 15%에 불과하고 인구 1인당 산림면적(0.157ha)과 임목축적(5m<sup>3</sup>)은 세계 최하위국에 속한다. 인구증가, 목재수요증가, 공익기능확보, 국민의 다양한 욕구충족등을 감안한다면 산림의 절대면적은 지금도 부족한 입장이다. 따라서 산림의 임업외적 개발은 만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금지되어야 한다.

또 산림이 전국토면적의 66%를 차지하고 있다면 국가자원관리 측면에서 이보다 더 위대하고 중요한 자원이 어디있겠는가? 이러한 자원을 관리하는데 투입되고 있는 국가예산은 고작 993억여원으로 국가전체 예산의 0.5%도 채 못되며 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수에 있어서도 국가공무원이 2,010명, 지방공무원이 2,799명으로 모두 합하면 4,809명이되나 전체공무원수의 0.68%밖에 안된다. 전체 산림관계공무원이 650만ha의 산림을 관장한다고 보면 1인당 1,350ha의 산림을 담당하는 셈이되고 실제 일선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수로 환산한



다면 1인당 3,000ha가 넘는다.

이와같이 적은 예산과 적은 인원으로 산지의 자원화가 실현될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토의 공원화, 전국토의 자원화를 외치며 현재와 같이 산발적으로 계획성 없이 추진한다면 가시적이고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내면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없고 결코 산지의 공원화, 산지의 자원화를 도외시하여서는 국토의 공원화, 국토의 자원화는 한낱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회가 고도산업사회화할 수록 산림은 임산물생산과 같은 1차산업으로서의 역할보다 2, 3차산업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중요시하게 된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며 더욱이 세계선진국들은 임업을 산업의 차원에서 보다 인간의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산림의 파괴를 막고져 갖가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

고 선진국에서는 매년 산림면적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국제간 자원협력체제의 강화, 국민여망에 부응한 산지의 자원화, 모든 관련산업과의 연계성 확보등 막중한 임업정책의 수립기관이 현재와 같은 청단위 기관으로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체험한 바며 항구적이고 계획적인 임업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림청기구의 축소는 커녕 기구의 확대조정이 불가피하다. 산림부국을 이룩하여 후손에게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물려 주려고 한다면 전국토 면적의 66%나 차지하고 있는 산지의 자원화가 어떠한 정책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않된다. 끝으로 현재까지 천시받아온 임업이 제 자리를 찾고 임업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임업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한다면 산림청기구 폐지론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

## 나무의 마음

이 은 상

나무도 사람처럼 마음이 있소  
숨쉬고 뜻도 있고 정도 있지요  
만지고 쓸어 주면 춤을 추지만  
때리고 꺾으면 눈물 흘리죠.

꽃 피고 잎 퍼져 향기 풍기고  
가지 줄기 뺏어서 그늘 지우면  
온갖 새 모여들어 노래 부르고  
사람들도 찾아와 쉬며 놀지요.

찬서리 눈보라 휘몰아쳐도  
무서운 고난을 모두 이기고  
나이테 부르며 크게 자라나  
집집이 기둥 들보 되어 주지요.

나무는 사람 마음 알아주는데  
사람은 나무 마음 왜 몰라주오.  
나무와 사람들 서로 도우면  
금수 강산 좋은 나라 빛날 것이오.